



비은행금융회사, 가계대출 · 다중채무 위험 급증

김혜란 연구원

■ 비은행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과도한 자산성장으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- 비은행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은 2011년 상반기 말 275조 8천억 원에서 11월 말 현재 289조 3천억 원으로 4.9% 증가하여 같은 기간 은행의 2.2%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증가세를 보임.
- 총자산도 2008년 6월말 610조 4천억 원에서 3년 새 45.7% 늘어난 889조 1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은행 대비 4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임.
-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능력이 취약한 비은행의 과도한 자산성장은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음.

〈표 1〉 총자산 및 가계대출 증가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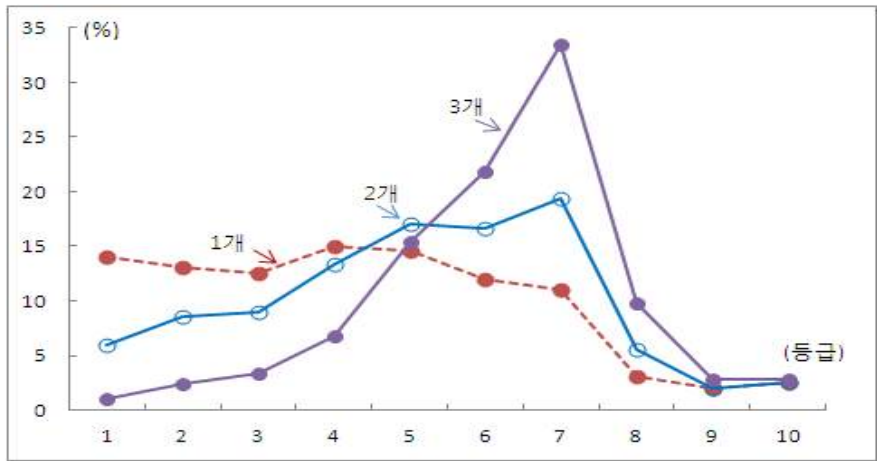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, %)

년도	총자산			월	가계대출		
	합계	비은행	은행		합계	비은행	은행
2008.06 말	2,347.7	610.4	1,737.3	2011.06 말	718.2	275.8	442.4
2011.06 말	2,805.4	889.1	1,916.3	2011.11 말	741.3	289.3	452.0
증가율	19.5	45.7	10.3	증가율	3.2	4.9	2.2

■ 특히,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중심으로 비은행서민금융회사의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.

-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신용등급별 비중을 보면 1~4등급은 7% 이하지만, 5등급 15%, 6등급 20%로 높아지고 7등급은 30%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, 약 300만 명 정도가 7등급에 속함.
- 경기가 둔화되면 금융회사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신용이 낮은 계층의 대출을 먼저 회수하게 되는데, 이미 연체가 시작된 8~10등급을 제외한 7등급의 한계차주부터 부실이 발생하게 됨.

〈그림 1〉 신용등급별 다중채무 차주수 비중



자료: 코리아크레딧뷰로(KCB).

■ 금융위원회는 비은행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가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축소로 서민금융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책마련에 착수함.

- 금융당국은 우선 다중채무자 문제를 포함한 비은행권 대출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기로 하는 등 6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 비은행권에 맞춘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시사함.
- 그러나 비은행권은 업권마다 특성과 규제가 다른 데다 감독권도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근본적으로 통제가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잠재 부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선불리 건드릴 경우 대출 억제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음.

(한은, 연합뉴스 등, 12/15)